세계경제, 한국 경제 그리고 지역경제

김홍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목 차

- 1. 세계경제
- 2. 한국경제
-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4. 결론

1.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1. 3개의 패러다임 전환

1) 자유무역 → 보호무역

2) 개방적 민주주의 → 권위주의/민족주의:

3) 중미갈등 = 신냉전

2. 3개의 국내 경제문제

1) 단기: 비용 상승 (최저임금 급격인상)

2) 중기: 고용 위기의 고착 (과거의 유럽식 실업 고착)

3) 장기: 재정 트릴레마 (복지 – 세금 – 국가 부채)

1.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2. 코로나 이후의 세계 (World after the Coronavirus)

1) De-Globalization +GVC재편+ 월가식 주주자본주의 타격

2) Digitalization + Untact 비즈니스와 생활

3) 미국(서구)의 지배성약화 – 미중 신냉전2.0 ->G2 에서 G0 시대로

2. 세계경제의 대전환

1) 글로발리제이션 급정지

- 세계화에 대한 추가적 결정타: 미중 갈등과 트럼프 보호주의에 이은;
- EU 붕괴 가능성 까지; 역내 자유이동 (shenggen 규정) 정지; 의료기기도 수출정지
- 코로나 대응에 각국 정책 독립성 필요 증가 (환율); 독일 의존 부담 증가
- 이태리 등 유럽 공조 실패 (중국이 오히려 지원);
- 재정은 각자, 통화는 통일 모델 한계 노정; 아시아도 AMS논의 스톱

2) 월가식 주주자본주의 타격:

- 이미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 stakeholder capitalism 으로 전환 모드 시작

; 과도한 주주 배당 비판 고조: 배당 후 적자 전환: 지원 요청 (예: 미국 보잉사;);;
과거 2008년 때 비판에 이은 추가 타격;

3) 서구(미국) 우월주의 타격–> 트럼브 정책 혼선 (오바마케어 취소**)**

-> 서구식 민주주의 대 동양식 권위주의적 바이러스 대책; 문화의 충돌 (마스크 대 비마스크);
미국의 국수주의적 자국이기주의 (예: 유럽차단; CDD역할축소); 선진국들의 각자도생, 국제공조 부재
제조업 중심의 동아시아와 서비스업 중심의 서구의 충돌 (마스크 및 의료장비 취약)

-- 미중 신냉전2.0: 대 중국 단일전선 (관세 중심)? 중국 영향력 강화? (중국 주도 다자주의 ; 해외지원)

2. 경제경제의 대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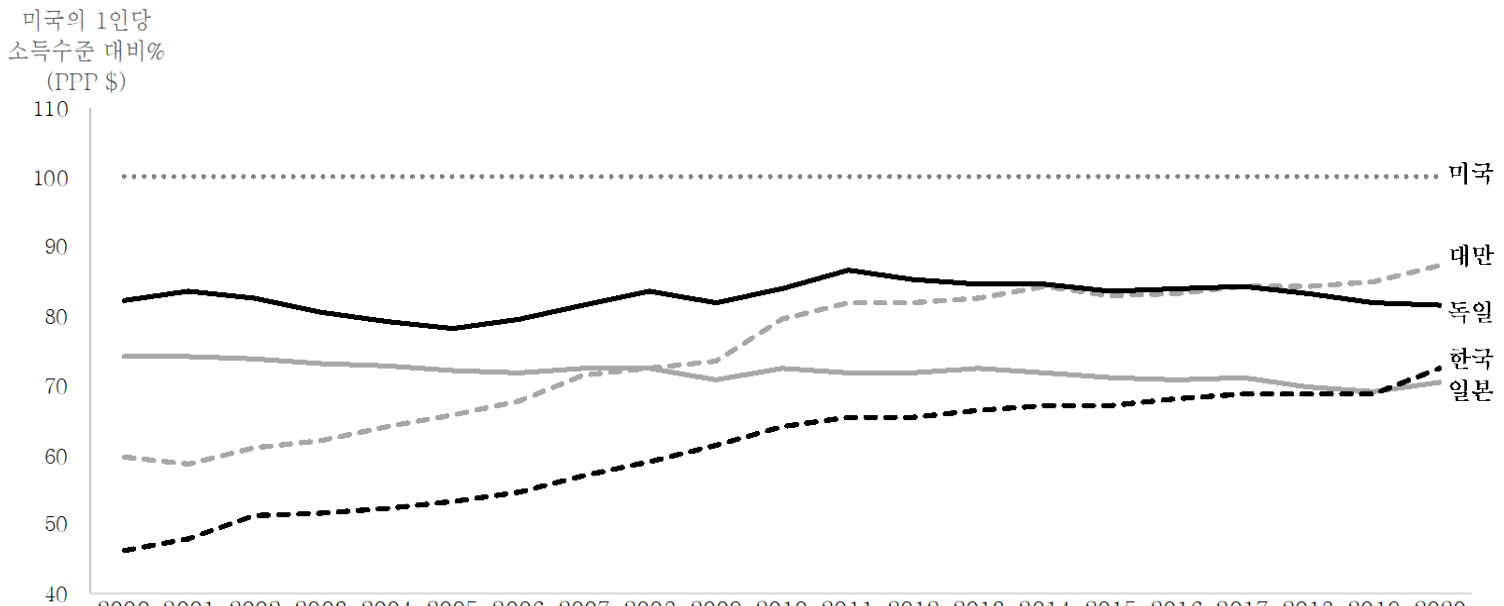
4) GVC 재편: 보다 내국지향적; reshoring (이미 4차 혁명으로 가능)
최소 복수 공급자 확보 노력; 농업/식량생산도 영향 (외국인/이민 노동자 이용 방식 곤란)

5) 광범위한 디지탈화 촉진: 헬스, 교육, 노동시장, 정치 (비대면 의사 수렴 및 투표)
각종 회의의 원격화 (교통비용/시간 절약; 환경 개선)
유통 혁명 가속화: 쿠팡 등
디지털 화폐 (비대면), 제로페이형 결제

6) 환경에 대한 영향: 바이러스의 인류에 대한 경고;
인간이 환경을 위해 할 수 잇을만큼 하지않고 있다는 점을 노정

7) 빈부격차 다시 노정 및 추가 심화 가능성: 일국가 내의 빈부차이 및 선후진국 간;
세계경제 불안정성 심화; 늘어지면 식량문제 까지 비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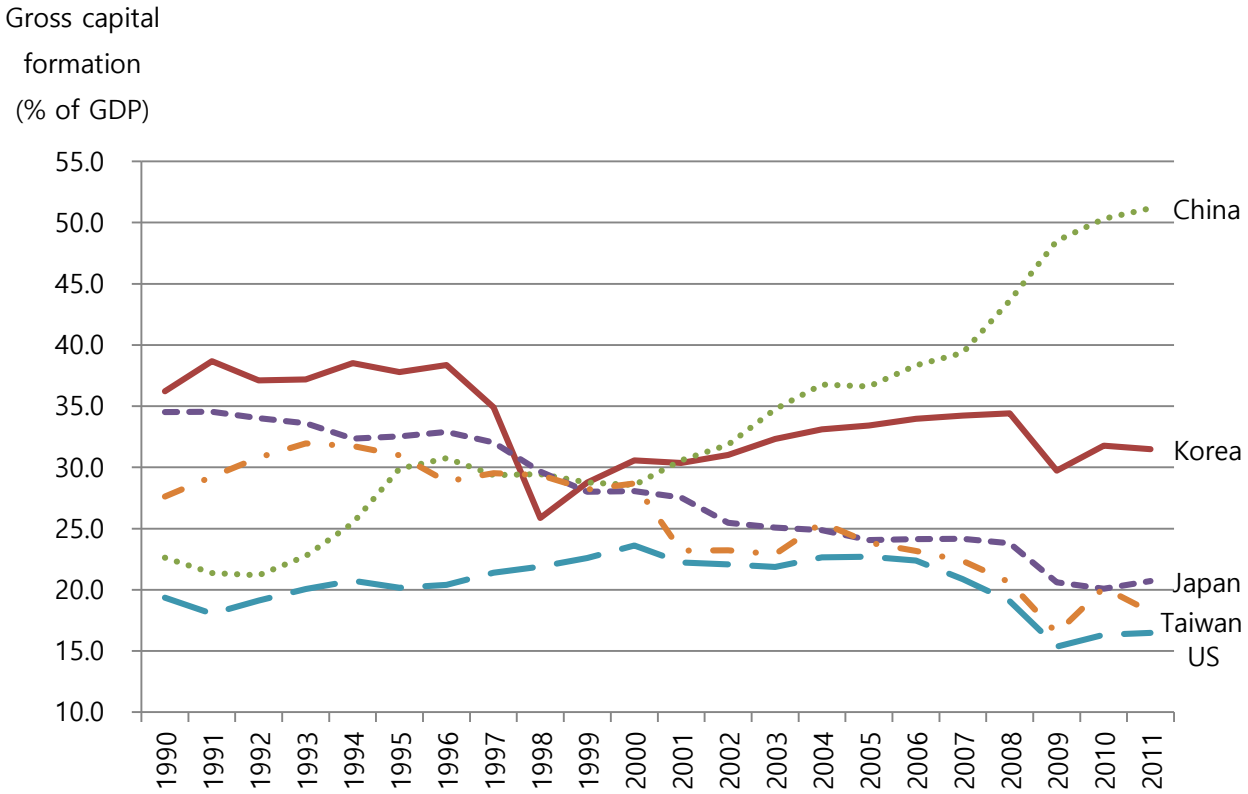
3. 한국경제의 위상
주요국의 미국 대비 일인당 소득 수준의 추격:
한일은 70%; 독일/대만은 80%+ (추격2.0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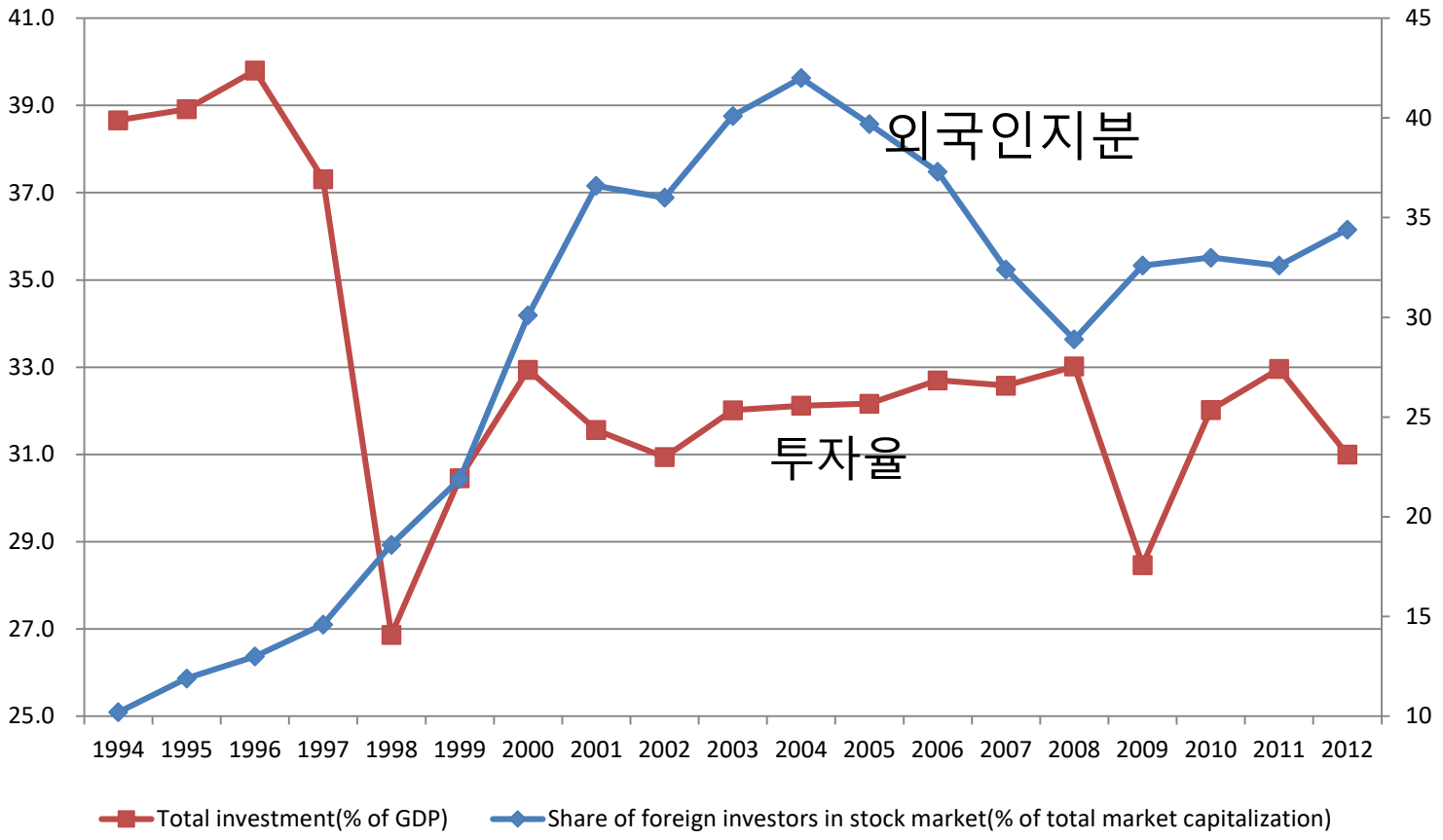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만	59.7	58.6	61.1	62.2	64.2	65.7	67.8	71.4	72.4	73.5	79.7	81.8	82.0	82.6	84.2	82.9	83.2	84.2	84.4	85.1	87.2
독일	82.2	83.6	82.7	80.6	79.4	78.1	79.8	81.6	83.5	81.8	83.9	86.5	85.4	84.6	84.6	83.5	83.9	84.2	83.2	82.0	81.5
일본	74.2	74.4	73.8	73.3	72.8	72.2	71.8	72.4	72.4	71.0	72.6	71.8	71.9	72.7	71.8	71.2	71.0	71.3	70.0	69.3	70.5
한국	46.3	48.2	51.2	51.6	52.5	53.3	54.8	57.2	59.1	61.3	64.0	65.3	65.5	66.5	67.0	67.1	68.2	68.9	68.7	68.7	72.5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외환위기 이후 고정투자 하락 -> 저성장의 뿌리:
(투자율이 35-40%대 -> 30-35%대로 5%P 하락)



외국인지분과 투자율: 역관계:
영미식 자본주의 도입의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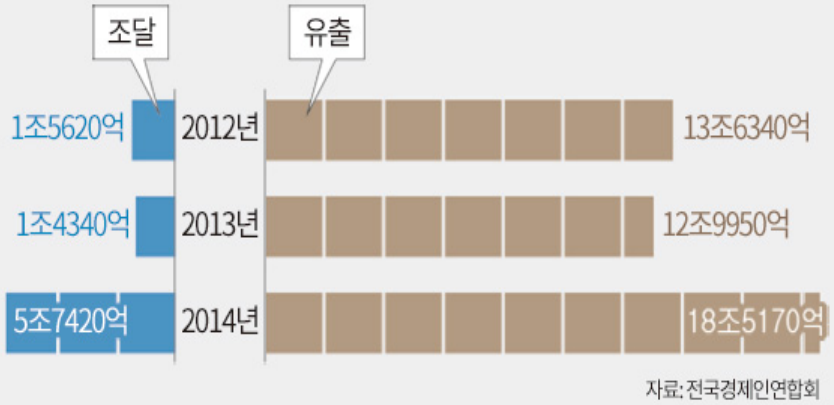


주식시장: 자본조달 기능 실패; 주주중시 경영 때문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한 기업

기업	업종	시기
SK브로드밴드	통신	2015년 6월
3노드디지탈	IT 기기	2013년 5월
코원에너지	도시가스	2012년 10월
아이레보	도어록	2009년 1월
옥션	인터넷 쇼핑	2004년 11월

자료: 금융감독원



*15년: 상장 요건을 갖춘 600개 기업 중 실제 상장 한 곳은 7개사(1.17%)뿐:
(증권시장이 자금조달 역할은커녕 '자금 유출 창구'로 전락)

- 2000년 이후 증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6조6000억원;
  cf)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통해 기업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18조6000억원;

* 삼성전자: 분기 배당 할 수 잇도록 정관 개정(2016/01);
  cf) 과거: 미일 경쟁 시기: 미국의 단기자본주의 대표 = 분기배당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조달한 돈 보다 기업에서 빼낸 돈 (배당, 자사주 취득) 더 많음: (자본) 시장 실패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Inflow	41,123	14,367	12,169	9,250	11,265	8,276	6,758	6,499	17,258	5,080	11,616	2,939	1,359	147,968
Outflow	3,427	9,283	9,823	7,812	15,317	13,498	12,538	14,985	15,191	11,151	22,529	28,254	11,161	174,969
자사주 취득	453	5,380	5,975	1,925	8,090	3,319	2,650	5,458	4,620	3,680	13,912	18,731	2,324	76,517
배당	2,974	3,903	3,848	5,887	7,227	10,179	9,888	9,527	10,571	7,471	8,617	9,523	8,837	98,452
Net inflow	37,696	5,093	2,346	1,438	-4,052	-5,222	-5,780	-8,485	2,066	-6,071	-10,913	-25,315	-9,802	-27,001

2010년에는 25조가 기업에서 시장으로;

Source: Shin, J. S., (2014),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Korean economy*

(Unit: Billion Korean Won: 십억)

기업의 주인은 누구?
주주자본주의의 vs.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전자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대표; 주주 이외의 당사자들의 권익을 무시;

- 주주가 회사의 법적 주인이라는 점에서 주주 중심주의는 언뜻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론적 근거는 탄탄하지 않다.
- 반면, 이 견해에 치중하면, 웬만한 투자는 주주에게 돌려줄 이윤을 경영자가 방만하게 투자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여, 세계적 차원의 저성장, 저고용으로;
-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 기업가치 제고는 주주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경영자, 노동자, 지역사회의 적절한 참여 없이는 불가능
- .

"기업은 기업이 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을 중심으로 경영되어야"

1) 자본을 제공한 금융자본,　　**2) 경영 노하우를 제공한 경영자본,**
3) 노동자들의 인적 자본,　　**4) 지역사회가 제공한 사회적 자본** ;

- 기업이 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본은, 그 성격이 해당 기업에서만 유용하거나, 특수성이 높은 자본 = Capital with No exit option
- 가령 그 기업에서만 유용한 특수한 숙련을 오래 쌓은 노동자들이 그럴 것이고, 기업이 망하면, 엄청난 평판의 붕괴와 종종 형사처벌을 받는 경영자본도;
  그 기업 주변의 길을 닦거나 인프라를 제공한 사회적 자본도 피해를 본다.

- 반면 금융자본은 가장 특수성이 낮은 자본 (가장 피해 적은: exit option)

❑탈 주주자본주의 위한 정책 방안

1) 장기보유유인주식(Loyalty-driven securities):
장기주의적 투자의 활성화
->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의결권/배당 부여
-> 장기적 기업 성장 (유럽연합차원의 제도 도입)

2) 차등의결권 (중소벤처 최초상장시에 한함):
창업자의 경영권 안정으로 장기투자 유도
(미국, 구글, 페이스 북 등 사례)

3) 외국인에 의한 기업M&A규제 강화
및 투자목적 변경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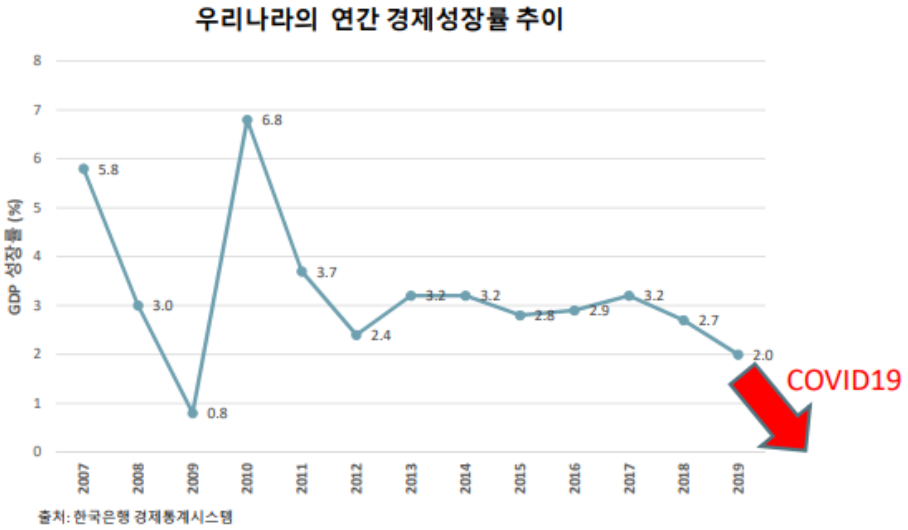
4. 한국자본주의의 미래

⇒ **코로나로 한국 제조업 중심경제의 강점 부각;**

- **그동안 뒤진 서비스업 (예, 원격의료) 을 이번기회에 디지탈화로 비약하여, 제조, 서비스, 농업이 잘 조화된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죽 가능.;**
-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지방 이중구조도 디지탈화로 극복 가능;**

- **디지털 인프라**
- **추격 1.0에서 2.0으로 (short cycle 산업에서 long cycle산업으로 전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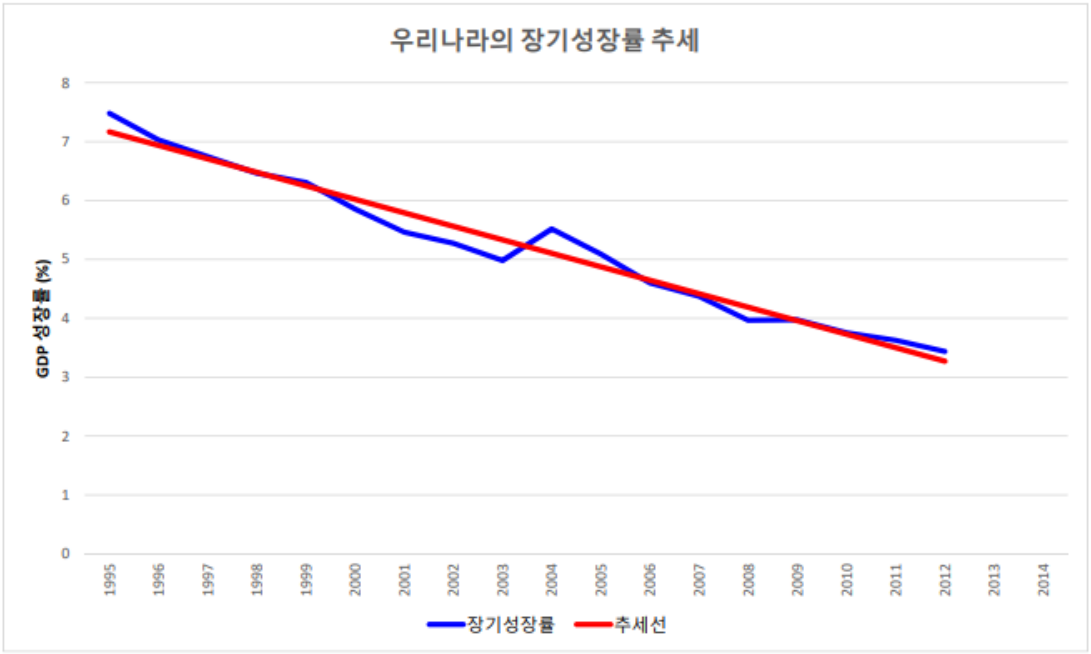
지난 해 성장률 2.0%+COVID19: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



- 2019년 경제성장률은 2%로 2008-9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최저치 기록
- COVID19 사태의 여파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4%; 4월 실업자수 1999년이후 최고치 기록; “최악은 아직 오직도 않았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률 향방?➔성장률 부진의 원인 공방: 대내적 vs. 대외적 요인? 구조적 vs. 경기순환적 요인?

한국의 장기성장율

김세직 (2016) “5년 1% 하락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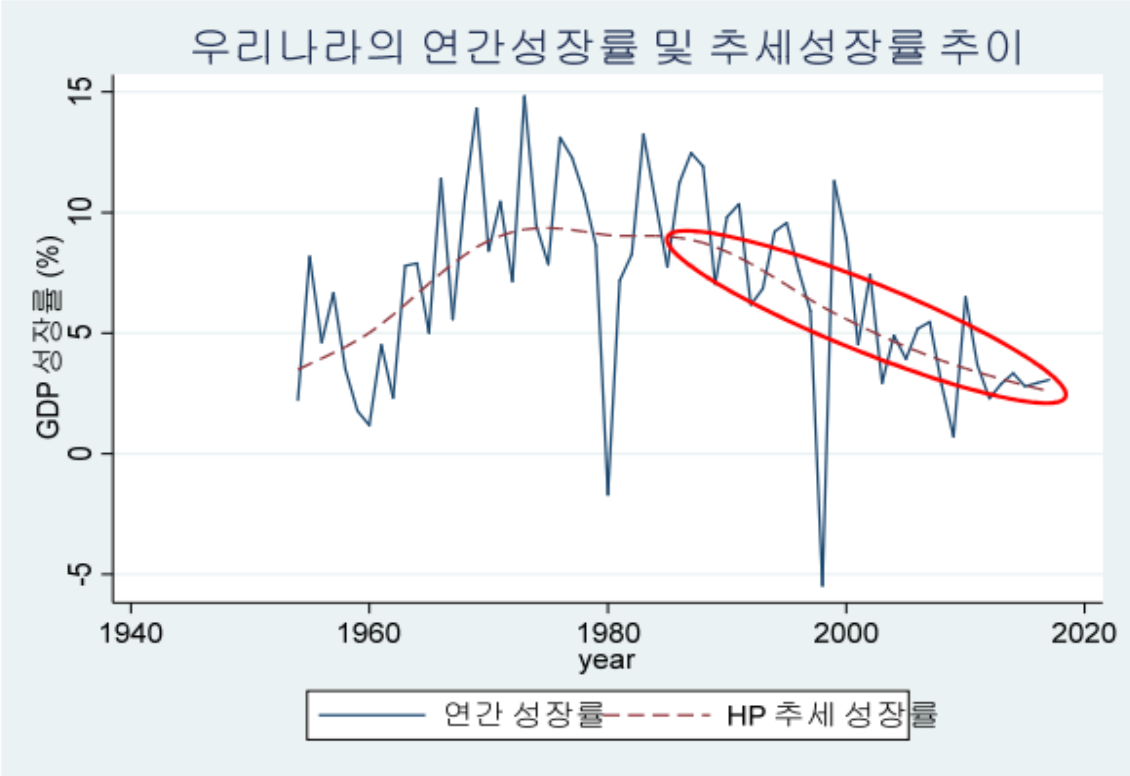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우리나라의 장기성장률은 추세선을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장기성장률: ±5년 중심 이동평균 (centered moving average)

장기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은 이미 오래 전 부터 시작된, 구조적인 현상



출처: Penn World Table 9.1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1980년대 중반 이후, 장기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그 배경은??

김세직-안재빈 교수 논문의 lesson

- 김세직 교수 법칙 : 장기경제성장율5년마다 1% 하락
- 원인 : 고용률 감소(60%) 산업구조변화(35%) 평균노동생산성감소(5%)
- 고용률 증대? (저출산, 고령화)
- 산업구조변화는 불가피 (2차 산업 ➔ 3차 산업)
- 3차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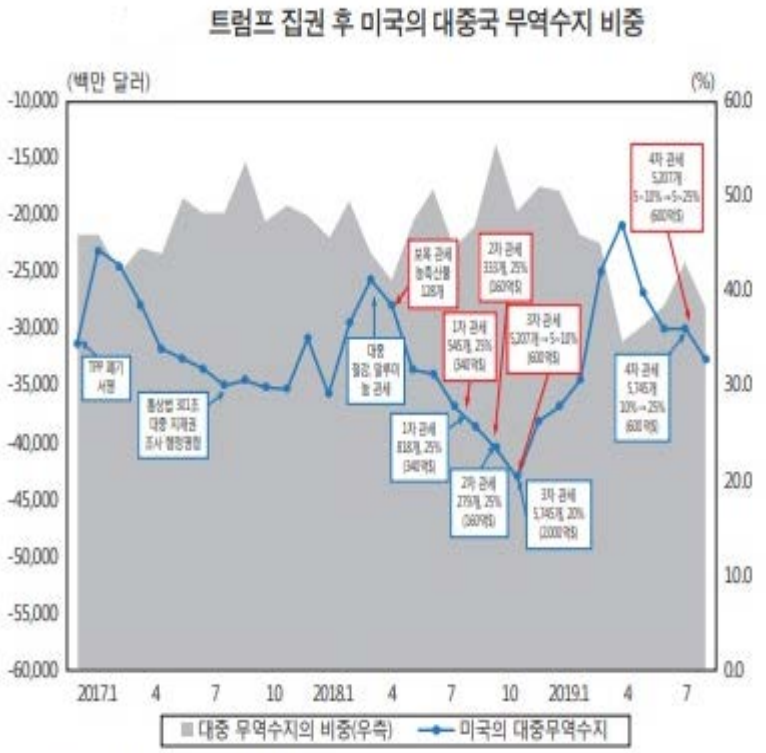
-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유연성/다원성/창의성이 요구 ➔ 대학의 교육혁신
- 대학의 사정 : 12년간 등록금 동결로 심각한 재정난으로 대학교육의 콘텐츠나 교육방법의 혁신은 먼 나라 사정으로 느껴짐.
- 대학교원의 상대적 임금은 매우 낮아져 우수한 인적 자본 소유자는 대학에 올 동기가 현저히 저하
- 이의 대책은 무엇?

6. 중미무역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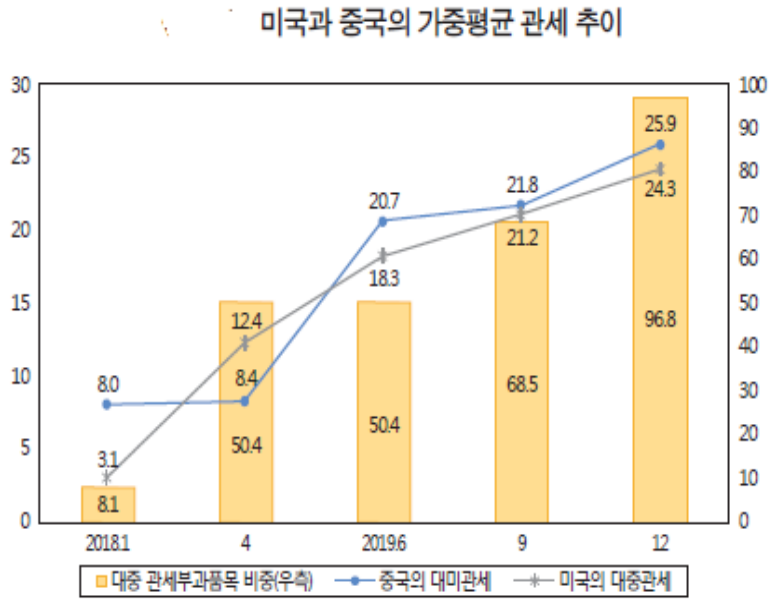
- ‘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500억 달러 관세부과
- 중국의 관세보복과 미국의 추가적 관세부과 등의 관세전쟁
- ‘19년 휴전과 1차 합의 등을 통한 수면 밑
- 코로나19 위기와 홍콩사태로 다시 수면 위
- 무역불균형만이 아니라 신기술과 안보문제 등 복잡한 문제
- 경제대국간 기술패권 경쟁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주도권 대립

1) 관세보복의 현황 :

- 일국의 관세부과는 상대국의 관세보복,
- 관세의 연쇄효과: 한부문(품목)의 관세부과는 다른 부문의 관세로 확대
- 유럽의 디지탈세 도입 추진
-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자료 : 미국 Census국 자료 이용 저자 작성.
주 : 그래프 하단 파란색 상자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이며 붉은색 네모는 중국의 대응 관세조치.



자료 : Bown(2019) 자료 이용 저자 작성.
주 : 관세는 무역량으로 가중 평균한 실효관세이며 대중 관세부과 품목 비중은 미국의 대중 수입품목에서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조치로 영향을 받은 품목의 비중을 의미.

자료 : KIET(2019)

2) 미-중사이에 낀 한국경제

- 미국과 중국은 G2
-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27%이고 미국비중(12%)('18)
- 높은 해외투자국
- 경제와 안보면에서 중요한 파트너: 경제는 중국 의존, 안보는 미국 의존
-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현상
-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3) 미중 무역전쟁과 GVC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VC 하락추세
- before(after)GFC: 무역증가율>(<)경제성장율
- Brexit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 등의 Globalization 후퇴
- 미중무역전쟁
- 코로나-19위기

▶ **GVC 불확실성 증대**

▶ **높은 CVC 참여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되고 대응하기 쉽지 않음**

▶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적절히 미중간의 눈치를 보는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

전방GVC: 우리나라<선진국
후방GVC: 우리나라>선진국

국가별 GVC 참여도(2015년 기준)

	전방 참여 (Forward)	후방 참여 (Backward)	총계 (Total)
한국	19.1	32.6	51.7
미국	22.2	9.5	31.7
일본	24.4	13.2	37.6
독일	21.9	21.0	42.9
중국	17.5	17.3	34.9
선진국 평균	20.8	20.6	41.4
개발도상국 평균	20.0	21.4	41.4

자료 : KIET(2019)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구조(국가)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GVC 참가			
대상국	자국부가가치 비중	전방 GVC	자국 수출 비중	후방 GVC	자국 수입 비중
중국	65.9	중국	37.1	중국	21.3
미국	70.1	베트남	6.6	미국	10.5
일본	68.1	멕시코	5.0	일본	9.0

자료: WTO

4) GVC 확대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증폭

◆ **GVC지수는 '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하다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둔화추세**

- 전체 GVC 중 저부가가치 위주의 단순(simple) GVC는 줄었으나 고부가가치 위주의 복합(complex) GVC는 늘어난 점
- 신기술 발전과 함께 GVC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GVC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 · 복합이 확대
- 지역 내 GVC 재편

◆ **GVC를 통해 생산·소비의 주체와 제조업·서비스업을 포괄하는 모든 경제 활동의 국가 간 연계 심화**

- 국지적·경제적 리스크가 타 국가 또는 타 지역으로 증 폭·확산
- 비경제적 리스크가 GVC를 경유하여 경제적 리스크로 전환
- 미중무역분쟁: 강대국의 정치경제 부문 패권 싸움이 GVC를 통해 한국과 같은 제3국 경제적 충격
- 일본의 소재부품수출: 일부 제품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 내 한 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위협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GVC의 후방참여도가 높은 한국 산업은 GVC내 공급망 충격과 GVC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에 더 취약**

6. 미중 기술패권

◆ 중국의 기술굴기

- 중국 정부는 산업 개혁을 추진하고 국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여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 중국제조 2025 : 디지털기술과 자동화
- 이에 따른 조치로 한국은 가장 높은 위험군(high exposure)에 속하는 국가로 평가되어 미중 기술패권으로 중국의 기술굴기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혜택 기대

◆ 미국의 시각 : 불법기술탈취와 안보위협

- 중국의 기술굴기 전략이 불법적이고 불공정(국가투자기금, 보조금, 우대대출, 수출보조금 등)
- 중국의 기술굴기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

6. 미중 기술패권

◆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중국의 경제정책

- 2001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은 세계시장, 생산의 중심 ➔ 미국의 막대한 무역불균형
- 중국의 통상, 투자, 산업, 환율 등 전반적인 모든 정책이 불공정한 관행
- 중국 내 외국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강요(비공식적)
- 스파이 및 해킹을 통한 기술 탈취 문제
- 정부지원자금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국기업의 미국 기술기업의 라이센스 취득 및 M&A

◆ 안보위협

- 첨단기술 성장은 미국의 경제적 안보에 해를 끼치는 요인임과 동시에 국방에도 큰 위협
- 첨단기술은 상업용 기술임과 동시에 국사장비기술 : 반도체, AI, 5G

➔ FDI 제재와 수출규제, 그리고 우방국 압박정책

미국의 대응

- Rodrik의 삼자택이에서 높은 경제통합(세계화)를 포기하고 주권국가와 대중민주주의흫 선택
- FDI 제재와 수출규제, 그리고 우방국 압박정책
- 무역제한조치 : 수출관리법('79)이 수출제한법('18)으로 확대
- 투자제한조치 : 2007년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제정, 그리고 2018년 외국인 투자 위험 리뷰 현대화 법
- 중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주요 기술 탈취 목적의 M&A 제재

7.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충격

◆ **감염통제에 따른 생산중단 및 노동이동 금지**

➔ 제품공급이나 중간재조달에 충격을 주는 글로벌 공급망 마비

◆ **코로나19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상당수 마비 혹은 붕괴**

➔ 글로벌 리스크 증대에 따른 경제 전반적 하강위험

◆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의 경우**

- 공급망 복구 과정에서 리스크가 큰 국가는 안정 적 생산활동 재개와 지속적 공급망 연결이 가능한 국가로 대체
- 향후 새로운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글로벌 핵심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좋은 기회 요인
-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주요국의 생산 차질은 새로운 제품과 시장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잠재적 기회를 제공
- 언택트(untact,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은 기존 산업과 GVC의 디지털화 및 서비스화를 가속화해 국내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여 GVC의 업그레이드와 산업혁신을 추동하는 기회 가능

변화하는 글로벌가치사슬과 한국의 대응

- 미중 무역 전쟁, 중국의 기술굴기, 한일 무역갈등은 국제 교역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한국경제 및 산업에 상당한 위협요인
- 글로벌 가치사슬은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의 선택, 지리적 요건 및 특성 등과 같은 객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 글로벌 가치사슬 분절은 국제교역구조가 더 이상 기업의 비용절감, 지리적 특성이 아닌 국내정치 및 정책, 국가간의 협상, 관계 등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에 의해 영향
- 글로벌가치사슬의 불확실성 증대
- 무역-투자 제재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대응은 중장기적(회수비용 등 고정비용)
- GVC에서 서비스의 역할 증대/ 특히 지식서비스, 지식자본의 중요성 증대➔ 지식자본 축적

- **통상정책: 교역제품 및 교역대상국의 다변화 노력**
- **안보-통상-산업 연계전략: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이슈를 다루는 컨트롤타워**
- **이익을 공유하는 국제적 공조**

New normal: 저성장과 불평등

- 저성장과 불평등의 문제
- 저성장시 어려움의 강도가 저소득층이 큼
- 포용 성장의 중요성: 저성장에 대한 부담을 대부분 부담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

8. COVID-19 위기

- COVID로 인한 온라인 등의 untact 활성화
- 비록 covid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과거의 경제 상태로 roll back은 안될 것임(경제는 hysteresis: 관성이 존재)
- COVID로 인한 부문별 피해 상대적 정도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대기업

✓ 서비스업>제조업

✓ 오프라인사업>온라인산업

✓ 온라인 유통업의 활황은 소형매점보자는 중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을 대체

소상공인 대응 전략 및 정책

- 분명히 untact/디지탈 사회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이나 대응전략이 고려되어야 함

✓ 소위 uncontact를 통한 remote working, work home등으로 지역적 집중, 인구집중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지역의 강점이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

✓ 지역의 거주환경이나 지역의 인프라만 제대로 구축되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

✓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 차원의 전략이 필요함

한국형 뉴딜정책과 소상공인정책

- 디지털 뉴딜과 green new deal

디지털화 관련 강조는 많이 지적됨, green new deal은 상대적으로 적음

- 중기부의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지원정책"은 매우 바람직.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간의 협업과 상생이 중요함=➔ 소상공인 혁신의 동력
-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디자인을 세밀하고도 정교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상생협력이 필요

- 그린뉴딜과 소상공인지원정책의 결합도 필요

➔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밀집지역에의 기후변화완화와 적응을 촉진하는 시설 구축이나 리모델링

지역적 차원의 그린뉴딜정책이 필요함

- 탄소방출억제나 포집/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확대
-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밀집지역에거점별 환경친화적 그린도서관 설립
- 전통시장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에너지절감 그린뉴딜정책

- 소상공인은 공동체의 삶의 질과 거주환경을 결정하는 인프라임

(소상공인의 가치: 질좋고 건강한 빵집, 좋은 카페, 좋은 음식점, 편리한 편의점을 갖춘 공동체의 가치)=➔ 지난 과거 추억

-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변화 및 변혁을 해야 한다

- 변혁을 주도하도록 소상공인 역량강화에 기여하도록 정책이 치밀하고도 정교한 소상공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기